

#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 - 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종오 (계명대, 사회학)

1차적으로 1960-1987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한국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사회세력의 연합운동이었다.

이 점에서 이 운동은 단일한 이론적, 이념적 구조하에서 진행된 역사상의 다른 사회운동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유럽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가졌던 것 같은 이론적 명료성과 이념적 지향성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운동은 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다양한 사회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성격논쟁’ 혹은 ‘사회구성체논쟁’이라고 불리는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의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로 지식인과 지식인 운동가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 이론화의 시도에 불구하고 이 운동의 이론적, 이념적 표현과 성취는 현실운동의 폭과 깊이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이 운동을 민주화를 표방했던 김영삼, 김대중 2명의 대통령의 출현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진행중인 운동이라고 이해한다면, 한국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과 이념적 궤적을 ‘최종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다.

이는 특히 한국역사상 이른바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과거의 정치세력에 의해 포위되고 고립화된 가운데,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상황이 한국민주주의의 완성이나 민주주의로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불철저하였으며 형식

적이었고 그 결과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 형식하에서의 권위주의의 복귀라는 새로운 위험 아래 놓여있다.

이 논문은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민주화운동의 발전과 전개과정의 이념적 측면에 관한 한 고찰이다.

## 1. 민주화운동은 모든 사회운동의 중심

60년에서 87년까지 전개된 정치적 사회운동은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 등 다양한 명칭과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모든 명칭과 개념은 공통적으로 이 시기에 존재한 권위주의적 정권과의 직, 간접적인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모든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또한 이 시기 전체를 걸쳐서 그리고 사회공간적으로 가장 광범한 대중에 인식되고 영향을 미친 운동을 결국은 무엇으로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은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8년의 노태우 정권의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경실련 등의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의 적대적 투쟁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즉 민주화 이행기에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분화된 시민운동의 출현과 같은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이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시기의 운동을 단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1960년의 4월 19일에서 26일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이를 민중운동 혹은 분단극복 통일운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광범하게 통용되며 70년대 전태일 사건 이후의 민주노조 운동은 노동운동, 민중운동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강한 반정부 정치투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으며 논쟁의 여지없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민주화 운동으로의 규정 여부는 매우 예민한 현실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정치권<sup>1)</sup>과 시민사회에서 ‘일상의 파시즘’<sup>2)</sup> 논쟁등 참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반정부운동이라 하더라도 친북적 성향으로 인정되는 조직사건을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는 또 하나의 쟁점을 구성한다. 공식적으로 이런 성격의 사건이나 운동은 민주화유공자 지정이나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혁당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좌익조직사건의 역사적 실체를 재규명하여 성격규정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 즉 민주화 운동이 아닌 통일운동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예민한 논쟁적 사안이다. 따라서 87년까지의 정치적 운동과 사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은 가장 광범한 적용가능성과 유효성을 갖는 편리한 개념이지만 이 시기의 복잡한 제반 사항과 정치적 구조로 인하여 개념적 단순화는 무리와 위험성을 수반한다.

또한 아직 까지 정리와 연구가 매우 불충분한 72년 10월유신 이후의 망명자운동 혹은 해외교포운동의 성격을 갖는 해외에서의 반유신, 반정부운동을 해외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할 경우에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역시 매우 논쟁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모든 진보운동의 최대공약수는 한국의 민주화라는 합의사항이었으며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모든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한 그리고 이 다양한 운동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 공통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화운동은 모든 사회운동의 중심이었으며 결집체였다.

---

1) 2002. 7. 26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행사위 발언

2) 이른바 ‘문부식 논쟁’ 혹은 국가파시즘과 우리 안의 파시즘 이에 관해서는 한국 산업사회학회 주최 2002년 제5회 비판사회학 대회 조정환, 김진석, 조희연, 이광일, 김진호 의 발표를 참조

## 2.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19세기이래 전통적 사회주의 노동운동과 제3세계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은 자기 규정에 있어서 혁명(Revolution)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들 운동내부에 있어서 주된 개념적 경계선은 혁명, 개량, 보수, 반동이다. 혁명진영 내에서 민주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파시즘의 대두 이후 나타난 통일전선론, 인민전선론의 인민민주주의론, 신민주주의론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담론을 자유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민주주의로 협애화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좌익진영의 보편적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는 좌익 담론에 있어서의 계급적 단순화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 민주화 담론은 전통적 좌익운동의 담론에 의거한다기보다 70년대이래 남부유럽(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및 중남미 그리고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의 친미우익적 성향의 군부통치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자유주의 내지는 사민주의적 성향의 운동에서 유래한다고 하겠다.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 하에서 군부, 대기업, 관료의 복합적 지배라는 이들 지역의 공통적 속성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은 70년대이래 제3세계 민주화운동의 일환을 이룬다.

다만 분단상황과 동아시아적 자본주의 역동성으로 인한 소비사회의 출현이라는 점은 한국의 특수성을 이룬다.

분단체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 하에서 80년의 광주항쟁 이후 광범한 반미운동과 통일 운동이 출현하였다.

당시의 운동은 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순한 규정을 벗어나 민중, 민족, 민주주의 개념이 복수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화추진협의회'의 명칭에서는 아직도 민주화가 주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서는 민중·민주 개념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민주주

의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에서는 민중·민족·민주 3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3개념의 복수 사용은 87년 이후 민중을 주체로 민족·민주를 운동의 이념 혹은 목표로 설정하는 민족민주운동(약칭 민민운동)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90년대 후반기에 국민연합, 전국연합 등의 재야연합운동이 쇠퇴하고 특히 독일통일, 소련과 동구의 해체, 북한의 대규모 기근사태가 발생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전투성이 점차 약화되는 와중에 민민운동이라는 80년대 이래의 자기규정성보다는 70년대 이래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보다 온건한 전통적 언어의 사용이 다시 강화되었다.

이는 특히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이 과거 운동의 공식적 규정으로 등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현재로는 동구사회주의 해체 이후 '민주주의'와 '민주화'라는 언어가 혁명과 해방의 담론을 대체하는 경향 역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언어사용에는 시대적 보수화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협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일반원리라는 보다 보편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분단체제하에서의 언어사용과 역사적 상상력의 '억압'이라는 조건을 감안할 때에 한국 상황에서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언어가 갖는 의미는 다른 국가나 사회의 운동과 비교할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sup>3)</sup>

70년대 운동권 젊은이들이 즐겨 불렀던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외침 속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족적, 민중적 '恨'이 녹아있었던 것이다.

### 3.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중주의

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시종을 일단 60년의 4월학생혁명에서 87년의 6월항쟁이라고 볼 때 이 운동의 이념은 무엇이었는가?

일차적으로 이는 서구식 법치주의, 공정한 선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60년 4월 시위의 와중에서 친미반공주의라는 공인된 시대정서에 대한 어떤 파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운동의 결과 이승만 정권의 퇴진이라는 50년대 질서의 붕괴가 이루어지자 거리의 요구는 빠르게 급진화되기 시작하였다. 4월혁명을 4.19- 4.26사이의 시위운동을 넘어서 61년 5월 군부쿠데타 기간까지 지속된 일련의 운동으로 파악할 때, 이는 친미반공주의에 지배되는 분단질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 운동의 저변에는 민중적, 민족적 불만과 요구가 강력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당시의 집권세력과 중산층은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울 장안에 얼마 전부터  
이상야릇한 소리 하나가 자꾸만 들려와  
그 소리만 들으면 사시같이 떨어대며  
식은 땀을 주울 줄 흘려쫓는 사람들이 있으니<sup>4)</sup>

3)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4) 김지하, 당시 蠶語 중 소리來歷

김지하는 이를 1973년 유신 시대에 썼으나 이 “이상야릇한 소리”는 사실 60년에 이미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면에서 4월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도전이었으며 80년대 운동의 어떤 급진성도 따라가지 못하는 혁명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민중혁명이 ‘학생혁명’으로 지칭되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소한 4월 당시에 이 운동은 조직된 지도부가 부재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가 박탈된 운동이었다.

5.16쿠데타의 폭력에 의하여 좌절된 이 운동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전 기간 동안 주체와 지도부의 형성 그리고 요구와 목표의 언어화 즉 이념과 이론의 구체화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주화 운동은 호메이니와 바렌사를 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만델라가 과연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사적 경험의 와중에 있었으면서 제대로 된 전쟁 문학 하나 없다는 탄식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민주화 운동은 경험의 폭과 깊이에 비해 이의 내면화와 정신적 표현에 있어 전혀 풍부하지 못하다. 예술적 표현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70년대의 김지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시 후기에 탈정치화, 탈운동화함으로써 ‘혁명의 시인’이 되는 데 실패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구조가 있겠지만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은 반공주의와 분단현실이 갖는 정신적 억압의 구조이다. 물론 한국의 반공주의, 분단현실의 엄혹함에 더하여 미국을 이상화하는 친미주의의 영향력이 한국사회에 압도적으로 군림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는 없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전체의 맥락에서 혹은 더 나아가서 전통사회의 성격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다.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독한 ‘보수주의’의 근원은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는 역사에서 과거와의 혁명적 청산이 부재하고 실패하였다는 데서 일단 찾아보아야 한다.

이런 역사적, 정치적 불철저성은 모든 개혁의 시도를 결국은 어정쩡한 실패로 만들었으며 이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도 결국은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인적, 제도적으로도 박정희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면에서 현재의 정치체제는 '파시즘과 자유주의의 불안한 동거'이다.

4월혁명은 그 성과가 5.16쿠데타에 의하여 뒤집혔다고는 하나 과거의 급진적 청산에 가장 근접했던 운동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후 모든 운동의 전범이 될 수 있다.

4월혁명 이후 '민족통일학생연맹' 등으로 나타난 '급진적 민족주의'의 요구는 때로는 잠복된 형태로 또 때로는 공개된 형태로 표출되었다.

60년 4월에서 87년 6월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 운동은 요약하면 서구식 자유주의(대의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 그리고 70년 전태일사건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사회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상호간의 갈등, 그리고 연합의 역사로 파악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4월혁명 이후 최대의 대중운동인 1964-65년에 이르는 한일회담반대운동은 전통적 반일민족주의의 표출로서 국가와 자본의 '매판성'을 규탄하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지배하는 운동이었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군사정권의 출현으로서 좌절된 문민민주주의를 재복원 하자는 일반민주주의적 요구가 존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6.3 운동 역시 4월에서 6월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한 고리를 이룬다.

군사정권이 출현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는 매우 중대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강권으로 밀어부친 한일협정 타결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월남파병에서 발생한 외부자원의 유입과 함께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의 고도성장기에 진입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구호물자'와 '썬레이션'의 시대를 벗어나 '수출·건설·증산' 구호 아래 '하면 된다'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만성적 과잉인구에 시달리던 농촌은 '몸팔러 서울로 가는' 군상을

무한히 공급하였으며 이 결과 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인구구성의 중점은 농촌에서 도시로, 산업구조는 농어업에서 상공업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었다.

이제 한국사회 빈곤의 문제는 '도시의 빈곤'이었으며 사회적 모순의 응축은 농촌을 빠져 나와 도시로 이주한 청소년 노동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70년 11월13일에 발생한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이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아울러 노동문제, 더욱 포괄적으로는 민중문제가 사회운동의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질서의 파괴로서 1969년 3선개헌이 이루어지며 전태일사건으로 산업노동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4월혁명과 6.3운동에서 부각되었던 민족주의의 과제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한국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지평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1975년 월맹군과 해방전선이 사이공을 장악하여 월남통일이 이루어진 사건은 북한사회주의가 휴전선의 장벽으로 차단되어 현실에서 영원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남한의 정치, 사회현실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농민운동의 이데올로기였으나 1970년대의 남한사회에서 농민은 더 이상 주도적 계급이 아니었고 더구나 정치적 농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시산업화 시대에서 급진적 민족주의가 아직도 유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답은 급진적 민족주의와 도시노동자, 지식인의 결합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중국, 인도차이나, 북한사회주의는 다같이 정치적 농민운동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일반은 농업사회 혹은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기의 정치이념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아울러 도시와 산업노동자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던 7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언어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사회주의적 언어는 철저히 금지된 상태였다. 지식인들도 내적인 자기검열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언어사용을 철저히 기피하고 있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동유럽의 맑스-레닌주의적 담론이 다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과 기독교사회운동의 민중신학, 민중론은 일정한 탈출구 혹은 대안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사회이론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집단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여타 세속적 사회운동의 주류는 결국은 급진적 민족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남한의 산업사회, 소비사회,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급진적 민족주의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반미자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었다.

80년대의 광주항쟁 이후의 첨예한 상황에서 주로 학생운동 진영에서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민중해방론'을 운동이념으로 '조국통일'을 당면과제로 설정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시 세계적 흐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그리고 한국의 사회구성상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이론논쟁에서 또 다른 축을 이루었던 계급적 혁명주의 역시 현실성을 갖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분단체제의 형성 이후 30년 이상의 물리적, 정신적 억압 조건이 이완될 때의 사회운동이 억압과 금지의 보상으로써 과도한 이념적 급진성을 띄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회운동이 초기에 보이는 관념적 급진성을 극복하여 성숙한 대중운동,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사례가 한국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급진적 민족주의는 지식인의 일부와 결합하였으나 중산층 및 노동자대중과 결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계급적 혁명주의가 급진 지식인의 씨클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은 당연

한 사안이었다.

또한 김대중, 김영삼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은 지역에 따라 분열되어 국민적 전국정당을 결성하는데에 실패하였다.

#### 4. 탈정치화와 '영원한 패배의식'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전두환의 군사정권에 저항하였던 민주화를 위한 연합운동은 87년의 선거에서 분열하였으며, 패배하였다.

이후 사회운동의 일부는 '시민운동'화하여 스스로 '비정치화'하였으며 일부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끄는 정당정치에 합류하였고, 사회운동의 독자정치세력화를 주창하는 또 다른 일부는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중독자후보와 민중당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후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은 현실 정치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양 김씨의 '후보단일화'나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지지'를 내세운 진영보다 더욱 급진적 언어를 사용한 민중당 지도부의 상당수는 역설적으로 극우적 요소가 농후한 한나라당에 결합하여 가장 신랄한 김대중정권의 비판자로 나섰다.

한국민주화운동은 국민적 정치세력화에 실패하였으며 형식적, 제도적 대의민주주의의 틀이 복원된 한국에서 더 이상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비극은 실질적 민주화 이행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화운동이 조기 퇴장하였다는 것이며 대중적 민주화운동이 사라진 이후 민주화는 구권위주의세력의 지역주의적 선동과 의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파행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하였으며 이는 결국 김대중정권을 정치적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국을 역사적으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성공사례로 보는 평가는 흔하다. 이런 평가에 의하면 한국민주화운동의 좌절과 한국민주주의의 파행도 '압축적 민주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이 이후의 역사에서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려면 김대중 정부까지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정착과정과 사회적 성과가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에 관하여 낙관할 근거는 없으며 2002년 대선은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지극히 중요한 고비를 이룬다.

이는 1987년이 민주화과정에서의 분수령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1987년에 '벡타이부대'라고 지칭되었던 중산층이 민주화시위에 가세한 것이 6.29선언을 강요한 주요한 요인으로 흔히 지적된다.

즉 성장한 중산층이 권위주의에 등을 돌리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중산층이 민족주의적, 계급적 성향의 급진주의에도 냉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87년에 권위주의를 배격하였던 중산층은 최소한의 자유주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회적 약자들과의 사회적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자신들의 특권적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어떤 개혁에 대해서도 완강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는 2000년의 의료개혁과 동과 사법개혁의 좌절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거부감에서도 이는 나타난다.

한국 중산층의 이런 보수적 태도는 노동자 대중과 지식인의 결합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 부재하다는 것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지식인, 종교인,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노동자, 서민과의 정치적 연대를 기피하였을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상층부와 연대전략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계급은 모두 대변인과 후견인을 갖지 못한 정치적 미아들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탈정치화와 결과적인 보수화에는 '양심적인 시민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87년 이후의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이나,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세력이 선거와 정치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편리하게 공명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주의는 일정한 전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민

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탈정치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민주세력은 스스로를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쟁취하는데 실패하였다.

양심세력, 비판세력이라는 언어가 나타내듯 한국지식인과 사회세력은 스스로 지배적 위치, 지배세력화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결여하고 있었으며 이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들이었다.

한국의 노동조합을 위시한 대중조직, 시민운동이 이런 정치적 수동성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민주화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수동성은 조선시대, 식민지, 분단시대를 겪으며 형성된 역사적 패배의식과 퇴영의 표현으로서 스스로를 항상 현실의 주변부 내지는 비주류로 위치지우는 피지배의식의 표현이다.

혹은 '영원한 패배의식'을 내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은 봉건적 신민이 근대사회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시도였으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는 노예가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시도였다.

한국지식인은 결국 혁명과 정치를 포기하고 비판에 안주함으로써 참다운 비판세력이 되는 데에도 실패하였으며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적 위치에 자족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지배집단에 대해서 뿐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주요한 산업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이나 한국지식인과 상류층의 정신적 대미의존성은 50년대의 구호물자시대를 전혀 못 벗어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은 한국의, 특히 상류층의 미국화 현상이 극히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식인의 대미의존성과 미국화 현상은 일반 국민의 평균보다 훨씬 심하며 상류층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상류층과 지식인은 민족적이지 않고 민중적이지도 않으며, 민

족과 민중은 한국의 지배층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한국 정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 5. 민주화 이행기와 전망

한국은 1987년이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명의 대통령이 이끄는 15년간의 민주화 이행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정권은 분명한 성격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후자는 김영삼(61년 5.16 쿠데타 이후의 최초의 민간인 집권자)의 등장과 더불어 군부의 통치가 막을 내렸으며 따라서 '문민정부'의 등장을 민주화운동의 종료 내지는 민주화 시대로의 본격적 이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민주화는 여타 세계의 민주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 매우 완만하고 방법적으로 매우 온건하였다. 우선 과거 군부권위주의 통치의 청산 방식에 있어서 노태우 정권 시기에 '5공 청문회', '광주 청문회'가 열렸지만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93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군부내의 정치적 분파를 제거하는 과감한 조치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집권 첫해의 광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과거 청산을 "역사에 맡기자"는 모호한 언사로서 과거청산에 대한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자체가 보수, 권위주의 세력 즉 청산의 대상인 과거와의 정략적 결탁에 의한 '3당 합당'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김영삼이 자신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구세력에 대한 배신과 철저한 결별을 전제하지 않는 한, 급진적 혹은 근본적 민주화의 추진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서 가

장 큰 기대를 모았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달리 과거 청산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4.3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보상법' 등의 제정이 이런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논란이 많은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의 결정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전향적 조치에 불구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많은 저항과 난관에 봉착해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은 15년이 경과되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 이후에 과연 민주화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는 현재 매우 불투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 이행의 중단, 즉 민주화 이행의 조기 완료 선언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민주화는 절반의 성공 따라서 불철저하고 불완전한, 총체적으로는 실패한 역사적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70년대 이래의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다같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와중에 90년대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미국주도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배적 이념으로서 한국사회에 다가왔다.

97년의 금융의환위기로 발생한 'IMF사태'는 경제, 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한국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전향적 대북정책, 사회정책과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의 혼선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라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민주주의의 진전, 탈냉전화, 지역주의와 중앙집중적 사회구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한국의 국가와 사회는 해결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하에서의 권위주의의 복귀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볼 때 개혁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은 다시 한번 민주화 과정에서의,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정치적 좌절과 패배의식을 극복하여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면한 과제는 2002년 대선에서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승리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제반 세력이, 특히 지식인이 현재의 정치적 수동성과 무기력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다.